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 인 천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 사 | 건 | 2014구합305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 고 | 한국가스공사 |
| 피 | 고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 | |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 | 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 | | 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 | | 5.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 | | 6. 부천시 오정구청장 |
| 변 론 종 결 | | 2014. 7. 17. |
| 판 결 선 고 | | 2014. 8. 14. |

##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2013. 7. 8. 한,

1) 재산세 2,841,937,980원의 부과처분 중 2,639,876,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재산세 93,124,220원의 부과처분 중 86,503,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3) 재산세 37,774,360원의 부과처분 중 35,08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

4) 재산세 2,037,140원의 부과처분 중 1,892,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13. 7. 8. 한,

1) 재산세 33,976,690원의 부과처분 중 31,560,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재산세 13,221,660원의 부과처분 중 12,28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3) 재산세 2,818,830원의 부과처분 중 2,618,420원을 초과하는 부분,

4) 재산세 1,298,950원의 부과처분 중 1,206,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5) 재산세 632,710원의 부과처분 중 587,730원을 초과하는 부분,

6) 재산세 554,050원의 부과처분 중 514,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7) 재산세 482,810원의 부과처분 중 448,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8) 재산세 419,590원의 부과처분 중 389,7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13. 7. 8. 한 재산세 668,0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2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라.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2013. 7. 10. 한 재산세 금 499,150원의 부과처분 중 463,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마.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2013. 7. 8. 한,

1) 재산세 428,670원의 부과처분 중 39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재산세 234,120원의 부과처분 중 21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바. 피고 부천시 오정구청장이 2013. 7. 8. 한,

1) 재산세 1,144,080원의 부과처분 중 1,062,7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재산세 899,120원의 부과처분 중 83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합계 9.48%)[1] 등이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12. 4.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2012. 6. 28.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2012. 2.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조례(2012. 6.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구 인천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2012. 2. 29.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제1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부천시 오정구청장은 구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2012. 3. 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6개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합니다)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경 각 관할구역 소재 건축물(업무용 건물 및 가스관, 수도배관 등 구축물)에 대하여 감면 없이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마 제1, 3호증, 을바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설립등기 당시부터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부처의 협의가 지체되어 납입이 지연된 것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문언은 반드시 설립시의 최초 자본금 납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1986년 말 설립목적인 천연가스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등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위 문언을 당해 법인 설립등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로 해석한 것은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부당한 축소해석이고,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는 문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에 근거하여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고, ③ 입법자의 의도는 지방세 감면대상은 유지하되 감면비율만 축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처분금액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감면비율인 100분의 75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인 9.48%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관하여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정되기 전의 것) 제3, 4, 5조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원고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 이상으로 하고, 원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가가 인수할 부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고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부분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며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부분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기 위함일 것인데,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인 점,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한국가스공사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국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던 1986년경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관회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원고의 지분 3.12%를 취득한 점, 이와 같이 당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후 설립등기를 하였는지 그 전에 설립등기를 하였는지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에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입법 당시 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충족하도록 한 자본금을 충족하여 설립한 후 설립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법인을 지방자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한 법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법인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 이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 2항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적용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같은 조 제3항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주주가 원고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사회가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등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처분금액의 100분의 75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인 9.48%를 곱한 금액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 처분청 | 과세대상 | 처분액(원) | 감면액(원) | 정당한 세액(원) |
|---|---|---|---|---|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송도동 364 | 2,841,937,980 | 202,061,790 | 2,639,876,190 |
| | 송도동 352 KOGAS 인천생산기지(#6변전소) | 93,124,220 | 6,621,130 | 86,503,090 |
| | 송도동 13-37 | 37,774,360 | 2,685,750 | 35,088,610 |
| | 송도동 13-37 한국가스공사 송도관리소(정압동) | 2,037,140 | 144,840 | 1,892,300 |
| | 소 계 | 2,974,873,700 | 211,513,510 | 2,763,360,190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가좌동 477-2 | 33,976,690 | 2,415,740 | 31,560,950 |
| | 원창동 455-3 | 13,221,660 | 940,060 | 12,281,600 |
| | 가좌동 477 | 2,818,830 | 200,410 | 2,618,420 |
| | 경서동 674 | 1,298,950 | 92,350 | 1,206,600 |
| | 원창동 213-1 | 632,710 | 44,980 | 587,730 |
| | 원창동 333-6 | 554,050 | 39,390 | 514,660 |
| | 원창동 336 | 482,810 | 34,320 | 448,490 |
| | 원창동 산 129 | 419,590 | 29,830 | 389,760 |
| | 소 계 | 53,405,290 | 3,797,080 | 49,608,210 |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고잔동 977-2 | 668,020 | 47,490 | 620,530 |
| | 소 계 | 668,020 | 47,490 | 620,530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장기동 무 1-2 | 499,150 | 35,480 | 463,670 |
| | 소 계 | 499,150 | 35,480 | 463,670 |
|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학익동 730-2 | 428,670 | 30,470 | 398,200 |
| | 학익동 730-2 제어동 외 1건 | 234,120 | 16,640 | 217,480 |
| | 소 계 | 662,790 | 47,110 | 615,680 |
| 부천시 오정구청장 | 삼정동 363-1 | 1,144,080 | 81,340 | 1,062,74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 | | | | |
|---|---|---|---|---|
| | 삼정동 363-1 | 899,120 | 63,920 | 835,200 |
| | 소 계 | 2,043,200 | 145,260 | 1,897,940 |
| 합 계 | | 3,032,152,150 | 215,585,930 | 2,816,566,220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일혁

판사 김연수

판사 김나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① 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끝.